국정운영 로드맵, 전남 지속가능 성장 '출발점' 삼아야

AI·재생에너지·농생명 중심 신성장 전략 도, 균형발전 선도지역 도약 과제 제시

새정부가 확정한 국정운영 로드맵을 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과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운영 방향과 전남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전남이 차전지・수소 산업 육성, 고흥 우주발사체 미래산업 중심의 자립형 지역성장 모델을 산업을 활용한 항공・모빌리티 산업 고도 이다.

에 대한 전남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남연구원은 3일 발표한 '새정부 국정 제시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 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를 연계한 이

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존 조선•철강 계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도 병행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에 발맞춰, 전남은 초광역 경제권 구 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완적으로 성장하는 다핵형 발전모델을 실 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가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을 혁신산업과 연 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 또한 새정부의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용과 연계해 '일자리-산업-정주'가 선순 향으로 제시했다. 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도 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고서는 청년층 정착과 지역 활력 회복 중심의 탄소저감 산업 육성과 함께, 영산 강 하굿둑 개방과 갯벌 복원 등 생태복원 했다. 전남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사업, AI 기반 재난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혁 축과 함께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상호 보 다. 더불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자 국 1위를 차지하는 전남이 식량안보와 농 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촌 지속가능성의 책임을 동시에 지닌 만 큼, 농업의 산업화와 농촌사회의 자립이 결합된 '전남형 농정체계' 구축이 필요하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를 전 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농업을 단순한 1 차 산업이 아닌, 생명·식량·환경이 결합된 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새정부 국정운 영의 방향은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끊 고, 지역이 자원과 인재, 산업을 바탕으로 자원과 농생명 기반 산업을 청년 창업·고 한 '기후적응형 안전도시' 구현을 주요 방 자생적 성장을 이루는 국가 대전환"이라며 "전남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혁신 농업 분야에서는 경지면적과 생산량 전 성장을 선도할 실험무대로, 지속가능한 성

> 전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전남정책연구 는 지역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분기별 연구간행물로, 연구원 홈 페이지(https://jni.re.kr)에서 열람할

> >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與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

민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 했다. 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 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 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실

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 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이에 따라 강 실장은 민주당에 이 법안 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날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

이 입법에 제동을 걸었음을 드러내는 대 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

나아가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 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에 이재명 대통 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대 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 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 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 불신 극복 사 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TF는 단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 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 법인 지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3년 새 1.6배 급증" 전진숙, 대기 평균 32.8일…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조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 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이3 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만 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3년 12만2729가구, 지 난해 13만9508가구로 3년 새 약 1.6

은 지난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지 났다. 난해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 ·기관연계형'이용은 지난 2023년 1 영 18개소 포함)이며, 활동 아이돌보 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 (17~19시, 99.6%)에 집중돼 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일제보다



는 어린이집 유 치원 등 공적 보 육기관과의 시간 적 공백을 메우 는 보완 서비스 로 이용되는 비 율이 높음을 보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평 균 대기 기간은 32.8일 (2024년 기준) 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즉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 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

전국 아이돌봄센터는 232개소(직 만7695가구에서 지난해 4만6950가구 미수는 2만9635명으로,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유연근무, 재택·플랫폼 감소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 노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사'(3년 주기, 응답자 3703명)에 따 따라 부모의 돌봄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근무 형태와 가족구 간(07~09시, 60.4%)과 퇴근 시간 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는 전남이다"

이재태 도의원, 정부에 촉구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남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 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각국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융합 등 첨 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무한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국가 과제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시설 구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AI 촉구했다.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에너

지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리한 인프라를 갖춘 전남은 인공태양 연 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넓은 부지 와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데 전남은 지 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고 풍부한 가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와 한전, 전력 관련 기업 670여 개가 집적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전남 만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 략과 균형발전의 시험대"라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과 글로벌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 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조성해야 한다"고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SRF, 두 달 만에 재가동 시설 보수·환경개선 작업 진행

악취로 인해 가동을 멈췄던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이 운행을 재개했다. 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SRF 운영사

포스코이앤씨는 이날부터 시설 재가동을 본격화했다. 앞서 SRF는 악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을 개선한다.

지난 9월 1~19일 가동을 멈추고, 시설 개 선에 들어갔다. 이후 활성탄 흡착탑 추가 설치, 유출부 차단, 여과집진기 필터 교체 등 시설 보수 작업과 악취 저감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탈취 방식을 전환

획하고 있다. 정화 등을 위해 평소 반입량인 하루 평균 500t의 절반 수준만 처리한다.

운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운영기준 개정…농도 변경때 최대 25%로 제한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 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 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행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하는 등 추가 악취 저감 컨설팅 추진도 계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3종주거 포스코이앤씨는 새로 설치한 장비의 안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 경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p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 예를 들어 제 1종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 뀌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 있다. 반면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 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 제 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준도 신설한다. PC나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 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 지 경감할 수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 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 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기준부담률은 8%지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6%로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 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 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 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 부지 면적의 8% 이내다. 건축위원회 심 의로 최대 50% 강화해 12%까지 늘릴 수 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 감해 6.8%로 낮출 수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광주 도시철도'서 계속

광주시는 현재 전력선 안정화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어 내달 22일까지 예정된 도로 복구 완료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월 광주 북구 광 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택시요금 현 실화를 위한 시민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12월22일까지 도로개방이 안되면 시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초 올해 개방 대상이 아니었던 20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류장 주변 도로도 작업 속도가 빨라져 4곳을 제외하고는 연내 개방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됐다.

연내 도로 복구가 어려운 정류장 4곳은 2공구 204(금호지구입구), 205(금호시 영1단지), 3공구 210 (해태2차아파트), 6 공구 219(중흥삼거리) 정거장 등이다. 광주시는 현재 1단계 구간 공정을 재조

정 중이며, 개통 시점을 다시 발표할 예정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지연된 점을 고 려하면 2027년 말에 1단계 구간 개통이